

국내 유일 ‘외국인 특성화’… 마이크로디그리로 역량 강화

〈소단위 전공제도〉

2026 사이버대 가이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직무대행 김병철)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 노하우를 온라인 교육 환경에 집약해 2004년 개교한 이후, 우수한 교수진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최첨단 온라인 학습 환경, 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국내 사이버대학 가운데 유일한 ‘외국인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원격대학이다.

◆ 사이버대학중 외국어 학과 수 ‘톱’

사이버한국외대는 국내 사이버대학 가운데 외국어·언어 관련 학과(전공)를 가장 많이 개설한 대학으로, 원어민 교원 확보 규모 역시 가장 크다. 대학정보공시 기준으로 사이버한국외대의 모든 외국어 전공 학부는 사이버대학 외국어 전공별 재학생 수에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기술 혁신과 사회·직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무 역량을 단기간에 강화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마이크로디그리는 기존 학위 과정보다 적은 이수학점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단위 전공 제도다.

특히 학과 간 융합을 기반으로 ▲AIa



사이버한국외대 전경.



사이버한국외대 강의 모습.

외국어 학과·원어민 교원 가장 많아 해외 대학·기관과 국제교류협정 교환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내년 1월 15일까지 총 4479명 선발

nd Language ▲중화권 크리에이터 ▲일본어 플러스 K부터 ▲스페인어 문화 예술 디렉터 ▲베트남어 의료통역 전문가 ▲유튜브 마스터 ▲미디어 콘텐츠 스토리텔링 등 다전공 연계 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의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또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스페인,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태국 등 해외 대학 및 기관과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

으로 교환학생 제도, 단기 어학연수, 해외 한국어 교육실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개교 초기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력하며 새로운 교육 모델을 구축해 왔다. 특히 2018년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협정 체결 이후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확대하며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학생들의 상황과 학습여건,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교내 장학제도인 ‘Need Based 장학제도’를 마련해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 재학생 3명 중 2명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 신·편입생 4479명 선발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인 사이버한국외대는 오는 2026년 1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학부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등 총 10개 학부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이번 모집을 통해 총 4479명을 선발한다. 정원 내 모집 인원은 1946명, 정원 외 모집 인원은 2533명이다.

정원 내 일반전형은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국내

주요 기업 등 위탁교육 협약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체 위탁전형, 부사관·장교 등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 위탁전형,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편입 전형도 운영한다.

입학 지원은 수능 및 고교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신입학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편입학은 2학년과 3학년 편입으로 구분되며,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입학 지원은 대학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cufs.ac.kr)를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모집 기간 내 입학원서를 작성·제출한 전형 평가는 자기소개서 70점, 학업소양검사 30점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ipsi@cufs.ac.kr)이나 전화(02-2173-2580), 카카오톡(cufs)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병철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직무대행은 “사이버한국외대는 학생의 삶과 조건과 학습 여건을 존중하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유연한 학사제도와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정근식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할 것” 취약계층 보호… 파주시, 겨울철 지원 확대

서울시의회 본회의 폐지안 가결

서울시교육감, 강한 유감 표명

“정치적 논리로 학교에 큰 상처 줘”

서울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하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6월 폐지의결된 뒤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시의회가 동일한 폐지 의결을 반복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의결은 정치적인 논리가 앞선 결정일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 보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국회가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시행 14년을 앞두고 있다. 정 교육감은 그동안 조례가 학교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가 자리 잡



정근식 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학생들은 민주주의·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해 왔고, 교육공동체로서의 권리가 조화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폐지 결정에 대해 그는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기반을 허문 조치”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반영한 극단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조례 탓으로만 돌리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 원칙 위에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더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두 바퀴”라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정치가 학생·교사·학부모를 갈라 세우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가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돕는 숙고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인권 원칙을 부정하고 폐지를 용인한다면 교육의 변화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지키는 일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보편성·불가침성·평등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3개월간 겨울철 종합복지대책 추진

파주시가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3개월간,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공백 해소를 위해 ‘2025년 겨울철 종합복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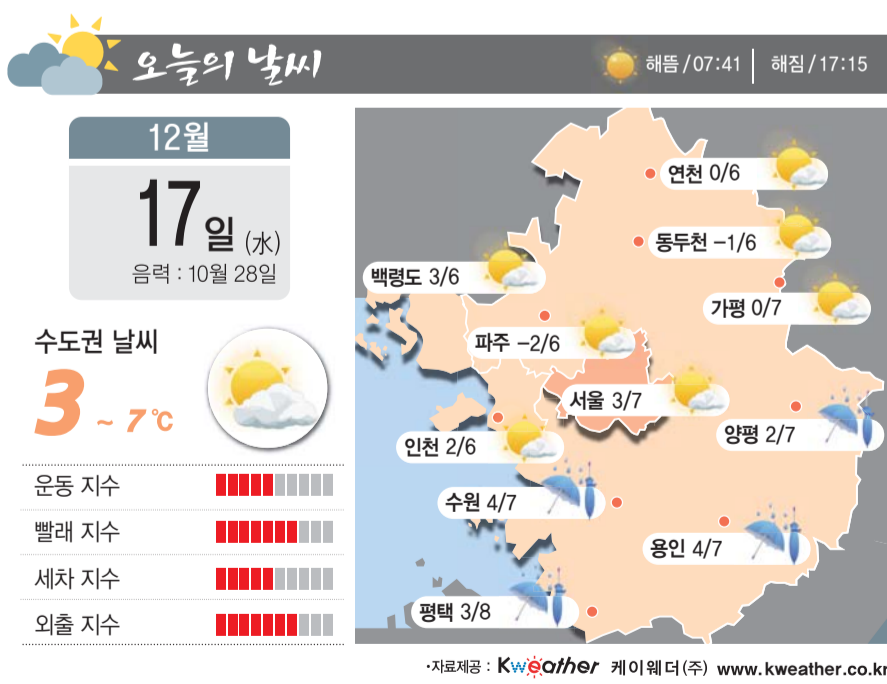
이번 대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목표로 ▲겨울철 종합 복지대책 지원체계 운영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지원 ▲1인 가구·노숙인·취약노인 보호 강화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리 강화 ▲나눔문화 확산과 민관

협력 확대 등 5개 분야, 1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복지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복지 관련 6개 부서가 참여하는 ‘겨울철 종합 복지대책 지원단’을 구성해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 연계망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고위험 1인 가구를 비롯해 어르신·장애인·취약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中, 안보리서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철회 요구…“내정 간섭”
▲미국인 절반 “지출 줄었다”…트럼프, ‘생활비 위기’ 속 경제 시험대
/사진 뉴시스

▲트럼프 2기 출범 후 관세 수입 2000억 달러 넘어
▲머스크 재산 첫 6000억 달러 돌파…1조 달러 ‘조만장자’ 되나

▲우크라이나 국민 4명 중 3명 “우크라이나군 돈바스 철수 중단 반대”
▲트럼프, 펜타닐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법적 실효성 의문